초등 의대반 보내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

태평로

김 민 철
논설위원

얼마 전 '초등 의대 준비반' 이 성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학부모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다. 서울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경기·경북 등 전국적으로 '초등 의대반' 을 홍보하는 학원이 많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런 학원의 커리큘럼은 대체로 초등 4학년까지 초등 수학을 마치고 5학년 때 중학 수학, 6학년 때 고교 수학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자녀를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파격적인 일이 분명하므로 초등 자녀를 '의대반' 에 보내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을 듯하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1~2년도 아니고 고교 과정 미적분까지 선행학습하는 것은 어떨까. 교육과정은 나름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아이들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해 짜놓은 것인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교육을 해도 부작용이 없을까.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A교수에게 물어보았다. A교수는 "아이들이 인지 발달 단계에 맞게 배우지 않고 몇 단계 건너뛰어 공부하면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어려서부터 너무 몰아붙이면 중간에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초등학생들은 정작 학교에 와서 "피곤하다" "(학교 공부는) 시시해서 재미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연령이 3~4학년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 얘기다. 교육학자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을 추적 연구라도 해서 이들이 정말 대입에서 원하는 학과에 가는지, 정신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았으면 좋겠다.

"교과과정, 인지 발달 고려한 것 단계 건너뛰면 부작용 클 수도"
저출산으로 수강생 줄어든 학원 불안 마케팅에 편승 아닌가

다음으로 학원의 '불안 마케팅' 에 편승하는 것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즘 저출산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학원들도 학원생 모집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학원들이 주요 마케팅 대상을 중·고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넓히고 있다고 한다. 부모들이 선망하는 의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광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숙고하지 않고 여기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할 시기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일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초등학생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는 지금과 다른 세상일 수 있다. 지금처럼 의대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것도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초등 3~4학년이면 의대에 진학하기까지 10년 정도 남아 있고, 의대에 들어간 뒤에도 사회에 나오기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 20년 세월이 지나서도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각광받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본인 의사와 적성을 살핀 다음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이 늘어서 학생들 역량이나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한국의 과잉 사교육, 선행학습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일어서서 영화 보기' 가 자주 쓰였다. 영화관에서 맨 앞자리 관객이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뒷좌석 관객도 줄줄이 일어서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 같이 안 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 시작하자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다. 초등 의대반에 보내는 것은 아예 의자 위에 서서 영화 보려는 것 아닌가.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다는 뉴스에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해 26조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보다 불안감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만 있는 것 같아 몇 자 적었다.

김준의 맛과 섬 [132]

통영 개조개

진해만 실리도 인근 바다에 뱃머리를 노랗게 칠한 어선이 조업 중이다. 그런데 그물도 낚시도 없이 두 사내가 배 위에서 바다에 줄을 넣고, 당겼다 늦췄다 할 뿐이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이어지더니 천천히 줄을 끌어 올렸다. 그리고 10여 분 후 큰 포말이 수면으로 솟구치더니 육중한 투구를 쓰고 우주복 복장을 한 사내가 올라왔다. 봄철이 제철인 개조개를 채취하는 잠수부다. 흔히 '머구리' 라 부른다.

이들은 왕우럭조개, 키조개 등도 채취하지만 개조개 채취가 목적이다. 개조개는 수심 40여m 깊이의 갯벌에서 서식한다. 산란 전인 3월과 4월이 제일 맛이 좋을 때다. 일제강점기에는 개조개를 마가패(瑪珂貝)라 불렀다. 당시 황해도 연평도 바다에서 마가패 어린 조개를 채취해 무의도, 영종도, 만도 바다에 뿌려서 양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명칭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 바다와 갯벌에서 나는 조개 중에 가장 귀한 조개라서 '개조개' 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거제나 통영에서는 물이 빠졌을 때 조개를 채취하는 것을 '개발' 이라 한다. 개발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영등사리에 이루어지는데, 욕심내는 것이 개조개다. 여수에서도 영등사리에 개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어민의 출입을 막아 놓은 갯밭을 열기도 한다.

개조개 사랑이 대단한 지역은 통영이다. 조개 육즙이 가득하고 살이 많아 탕을 끓여도 좋고, 구이로도 손색이 없다. 통영을 비롯해 거제와 진주에서는 개조개로 유곽(油槨)을 만들었다. 일명 '개조개유곽' 이다. 깨끗하게 손질한 조갯살을 다지고, 여기에 두부, 버섯, 당근, 양파, 방풍, 방아잎, 청양고추 등 채소와 된장, 다진마늘과 깨소금 등을 준비한다. 조갯살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설볶은 다음 준비한 채소와 양념을 더해 볶는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개조개 껍데기에 참기름을 두르고 담아 껍데기를 맞춰 덮는다. 마지막으로 화롯불에 올려 굽는다. '음식디미방' 에 '대합구이' 로 소개되어 있다. 통영에서는 통제영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절, 잔치, 제사 등에 내놓기도 했다. 지금은 통영 다찌집에서 내놓기도 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 說

'육아 전쟁'이 출산 기피 주원인, 저임금 외국인 도우미 검토해볼 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의해 국회에 대표 발의됐다. 월 100만원을 주고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시험 실시해 보자는 제안이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국제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망국 우려가 눈앞의 현실이 된 나라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다양한 육아 대책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무책임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국이 된 데는 아이 보육이 힘들어 '육아 전쟁' 을 치러야 하는 사회 여건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가 580만 가구가 넘지만 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기혼 여성이 140만명에 육박한다. 기혼 여성 6명 중 1명꼴로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맞벌이 가정에서 한 사람 버는 수입을 전부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정도로 육아비 부담이 높다. 그런데도 내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 동포에게만 가사 도우미를 허용하고,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조선족 도우미들이 입국하지 못하자 육아 도우미 임금이 더 껑충 뛰어 젊은 부부들의 고충이 가중됐다. 육아 고통을 겪어본 맞벌이 부부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르나' 라고 호소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1970년대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 미만 임금으로 맞벌이 가정이 육아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두 곳 모두 20만명 넘는 외국인 도우미 덕에 맞벌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임금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홍콩은 가사 도우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둔다. 일본도 2017년부터 도쿄도 등 일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일본인보다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면 출산 기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인력 수급과 더불어 지역·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데도 똑같은 최저임금에, 숙식까지 제공하니 실질임금이 국내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사퇴했는데 망신 주기 청문회, 학폭을 기회 삼은 정치 폭력은 정당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불복하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정군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과는 커녕 소송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퇴해 민간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또 다른 폭력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변호사는 여론의 큰 비난을 받고 하루 만에 사실상 경질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중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이보다 큰 벌이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자리에서 사퇴해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이런데도 청문회를 연다면 한 번 더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부인이나 자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학폭 가해자에게 가하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 정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청문회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장 90일간 쟁점 안건을 숙의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도 50분 만에 끝마쳤다. 이번에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하는 꼼수로 이 국회법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저녁 8시에 회의를 열면서 국민의힘에는 7시 54분에 통보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사회 전반의 학폭 규탄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정 변호사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사퇴해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린치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동영상 사설

文 터무니없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 궁지 몰린 한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서 40% 감축해 4억3660만t까지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안을 21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안과 다른 점은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을 14.5%에서 11.4%로 줄였다는 점이다. 산업계가 "5% 정도 감축이 실현 가능한 최대치"라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신재생 발전과 해외 감축 부문에서 문 정부 때 계획보다 각각 400만t씩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더 쌓아야 한다. 이것은 문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40% 감축' 이란 총량 목표는 뒤로 후퇴시킬 수 없다는 국제 규칙 때문이다. 태양광으로 석탄 발전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400만t을 줄이려면 3GW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 국내 최대라는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같은 태양광 단지(1.58㎢·48만평)가 30개 정도 더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겠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 그 실적을 우리가 가져오는 '해외 감축' 도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 정부가 이전 감축 목표 26.3%에서 느닷없이 40%로 끌어올린 것부터가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에서 40%는 돼야 한다' 는 문 전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 반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탄소중립위원장은 '2030년 40% 감축' 을 의결하면서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뒤에 보니 전력저장장치(ESS) 비용이 787조~1248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뽑아 놓고도 숨기고 있었다.

2030년까지 7년 사이 40% 감축은 경제의 일부를 멈춰 세우지 않고선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은 국제사회에 멋지게 보이고 다음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에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던져 놓았다. 그러고는 퇴임 열흘 전엔 바다를 메꿔 공항을 만든다는, 누가 봐도 선거용인 초(超)고탄소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박아버려 새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려 있다. 지금으로선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 소비를 줄이고, 삼척·영덕 신규 원전 재추진 등을 통해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특별기획 ①

newdaily.co.kr 뉴데일리

윤석열의 방일은 '세계로 가는 길'... 이승만·박정희가 개척한 '자유의 길'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공인가 일본인가?, 우리의 주적(主敵)은 중공(中共)… '평양'은 하수인에 불과
중공의 군사대국화, 과거 일본 군국주의보다 수백배 더 위험

한·미·일, 손잡고 중화 제국주의에 맞서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두 정상은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회복 등 군사안보
▲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 경제안보
▲ 한·미·일 협력
▲ 한·일 미래세대 교류에 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징용공 배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두 정상은 "한국의 구상권 행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 "앞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만 답했다.

군국주의로 치닫는 중공, 어떻게 하나

한국과 일본은 이 만남을 계기로 미국이 기대하는 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더 큰 전략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 중국의 영해·영공 침범과 인권탄압을 비판할 것
▲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줄여나갈 것
▲ 역내 국가들과 더 많은 군사·정보훈련을 할 것 등을 희망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의 〈자유 번영 평화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문건을 통해, 미국의 이 희망에 능동적으로 화답했다. 그는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 방문 후 곧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국제적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으로 또 한 차례, 또 한 차원 상승하는 셈이다.

이 도상엔 두 가지 내·외 리스크가 있다.

■ 내부 리스크

▲ '삼전도 굴욕' 운운 ▲ 신판 위정척사(衛正斥邪)
▲ 민족/사회주의 리스크가 그것이다.

NL 운동권은 징용공·위안부 피해 배상 등, 한·일 현안이 타결되는 것을 한사코 바라지 않는다. 정작 굴욕적이었던 것은 문재인의

▲ 중국몽(中國夢) 찬가 ▲ 중공의 3불 정책 추종 ▲ 방중(訪中) 혼밥
▲ (북으로부터 들은) 삶은 소대가리 칭호 등등이 아니었나?

■ 외부 리스크

중국 리스크가 그것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진영에 가담하는 것,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중국은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하려 들 것이다. 영공·영해 침범도 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기업들은 이에 공급망(supply chain) 다양화로 대응하려 한다. 투자 상대를 중국에서 동남아·중동으로 옮기려고도 한다.

이승만·박정희, '세계로 향한 길' 닦다
수천 년 쇄국주의 장벽 허물어…
윤석열, '세계로 연결된 길' 지킨다
미·일과 연대, 중공 견제해서…

한국인들은 지난 '나라 만들기(nation building)'를 통해, 대외 개방과 국제협력으로 매번 기적 같은 성취를 이뤄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도입 + 한·미 동맹], 박정희 대통령의 [대외 지향·수출 주도 고도성장], 그 발단이 된 [한·일 수교와 베트남 파병] 등은 그것을 '종속화'라고 폄훼한 측의 '죽창 가(歌)'를 뚫으며 낸 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단 미래산업 경제인들도 오늘의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진출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위대한 자유 한국인들의 세계를 향한 담대한 기획의 과실이었기에.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3월 17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광고형 기사'를 지원해주세요 17번째입니다.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